

의안번호	제 60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12월 7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609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7일
제안자 : 균형발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목적과 국민의 여망이 상실됨
- 2020년 10월 말 기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2%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집중되어있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비정상적인 국가 형태로 치닫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 초 집중화, 지방 소멸위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존속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특단의 근본 처방과 대책이 매우 시급함.
-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164만 도민과 함께 수도권 초 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상태 방치를 당장 중단할 것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 촉구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 대정부건의안 : 붙임참조

□ 보낼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목적과 국민의 여망이 상실되었습니다.

지난 7월 여당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청와대, 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말 기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50.2%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특히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전년 동기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 시·군·구 중 46.1%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초 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비정상적 국가형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 2020. 3~4 2만7,500명 유입, 2019년 3-4월 1만2,800명 유입

* 2020. 5월 현재 전국 228개 중 105개 시군구(46.1%) 소멸 예측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하는 파국은 예견된 수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인 시행은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길일 뿐입니다.

수도권 초 집중화, 지방 소멸위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존속 위기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혁신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근본 처방과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제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으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수도권 초 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상태 방치를 당장 중단할 것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촉구하며 164만 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 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길 요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국회는 현행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격상·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합니다.

2020. 12. 18.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